



리더십 공백 채우기: 유럽연합은 어디에?

케네스 로스(Kenneth Roth), 휴먼라이츠워치 사무총장

오늘날 인권의 옹호자 역할을 하는 정부는 누구인가? 미국이 재판 없는 감금과 고문에 의한 심문을 사용한 이후 잠재적으로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부시 행정부가 여전히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곤란한 주제를 피해하려고 사용하는 단어-를 외치는 것은 가능하지만, 스스로 침해하는 인권을 제대로 옹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영향력은 약화되는 한편, 중국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결코 인권의 리더가 아니다. 중국의 커지는 경제적 힘은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지만, 외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관심하다. 국내적으로 정치적 다원주의나 법치주의를 용납하려 하지 않는 가운데, 중국은 외국과의 관계에서는 인권이 내정 문제라고 주장한다.

국내적으로는 독립적인 의견을 탄압하고 체르니아에서 더러운 전쟁을 수행한 러시아 역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러시아의 목표는 특히 구 소련연방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재구축하는 것인 듯 하다. 실사 그것이 독재자들과 살인자들을 포용하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이다. 비판의 화살을 피하려다 보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인권을 “인위적 기준” 이라고 폄하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유럽연합과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인권 리더십의 잠재적 원천이 될 수 있었다. 양측 모두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어느 쪽도 리더십의 공백을 채우는데 필요한 일관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일하지는 못했다.

미국의 목소리가 작아진 가운데, 이제는 유럽연합이 가장 강하고 효과적인 인권의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유럽연합은 인권의 원칙 위에 건설되었으며, 국제 문제에 있어 위대함에 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확장으로 고심하는 동안 기대보다 매우 낮은 성적을 내고 있다. 다양한 회원국들 사이에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은 너무도 고되어서, 유럽연합은 그 잠재력에 비해 아주 작은 성취밖에 이루지 못했다. 유럽연합은

유럽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인권 향상의 문제에 관한한, 유럽연합은 개별 국가들의 총합 그 이하이다.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민주 국가들은, 일부는 민주화를 이룬지 어느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많은 수가 불안정한 신생 민주국가이다. 그들이 몇몇 국제적인 문제들에서 인권을 대변하기 시작했다. 희망을 주는 순간들이 있으나, 이들 국가들은 아직 공동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 지역적 경계를 초월하는 협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빈번하게, 인권에 대한 이상 보다는 지역적 협력에 더욱 충실한 모습을 보이며, 인권 보호를 약속한 사람들 보다는 이웃의 독재자들과 더 강하게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유엔의 새로운 인권이사회에서 특히 파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인권이사회는 신임을 잃었던 인권위원회를 개선하는 대신 그 실망스러운 행적을 반복할 것처럼 보이며, 유엔 체제 전체의 신뢰성을 손상시키고 있다.

요즘에는 모든 정부들이 인권을 무시하는데 대한 준비된 변명을 갖고 있는 듯 하다. 이따금 각국 정부 혹은 유엔 주재 대사들이 고결한 선언을 하곤 하지만, 실제적인 리더십 혹은 변화를 위해 필요한 지속적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약속은 선행조건들에 의해 흠집이 생기고, 참여는 예외 조항 때문에 망가진다. 수단 다르푸르의 범죄적 군사작전이 그러한 행위에 대한 징벌이 부재하기 때문이건, 유럽연합이 집단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만장일치가 필요한 이유 때문이건, 중국의 각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선언 때문이건, 미국이 이라크와 테러리즘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건, 혹은 개발도상국들이 지역적 결속을 위해 인권의 원칙을 희생하기 때문이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은 단호한 조치를 취할 절대적 의무를 압도해 버린다.

이러한 경향은 암담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신뢰성 공백이 특히 무법적인 현 행정부의 일시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앞으로 수년간 미국의 입지를 흔들게 될 장기적 문제인지는 부분적으로 새로운 의회에 달려 있다. 과거의 인권침해와 결별하고, 정책 변화를 추구하며, (인권침해의)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여부도 이 새로운 의회에 달려 있다. 그러한 인권침해의 설계자들이 여전히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가 쉽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주장할 수 없으나, 미국이 인권 옹호 국가로서의 손상된 명성을 되찾고자 한다면, 그러한 변화는 필수적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도 리더십은 필요할 것이다. 상당 부분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낮은 기대치의 수혜자들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국내외적으로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거의 없는 한, 그들이 그렇게 할 동기도 거의 없다. 그들의 새로운 경제적 힘, 즉 중국의 신흥 시장과 러시아의 에너지 보유고는 외국 정부들이 그러한 압력을 행사하지도 못하도록 위축시키면서, 그들을 향한 얼마 안되는 직접적 압력에 저항하는 능력을 강화시켜 줄 뿐이다. 한편, 중국의 늘어나는 해외 원조 프로그램은, 이전에는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국가들에 의지하던 독재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이러한 역학을 변화시키는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국제적 리더십을 추구하는 나라로 대우하고, 그들이 자국 국민들과 동시대인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며, 그렇지 않을 때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영향력과 존경을 얻는 길이 잔인함과 폭력이 아닌 책임 있는 국제적 시민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믿게 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인권에 대한 결의가 쉽게 에너지 계약이나 투자기회의 뒷전에 밀리면 그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몇몇 나라는 인권 조사에 적극적으로 저항 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국제적 기준의 적용을 촉진하는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또한 흔치는 않지만 어렴풋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세계는 개발도상국 중 진정한 인권 옹호자를 필요로 한다. 즉 조건 반사적인 지역주의를 시대착오로서, 독재 정부들이 압력을 피하기 위해 서로 결탁하던 시대로의 퇴보로서 거부하는 정부를 필요로 한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정부가 정기적 선거를 지지하고 그들의 국민들의 요구의 편에 서고 있는 만큼, 그들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자국 시민들이 누리는 것과 똑같은 권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많은 회원국들이 유럽연합이 마비상태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해결책을 찾고 있다. 유럽의 실험은 유럽의 경계 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전세계 인권 옹호자로서의 약속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했다. 필요한 변화 중 어떤 것은 비교적 쉽고 빨리 실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문성의 축적과 장기적인 전략의 추구를 위해 6개월 단위로 의장국이 순환되는 것은 바꿀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 기구들을 보다 투명하게 하여 일반적 가치와 정부 조치 사이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등, 전통과 약속의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다 근본적인 변화로는, 인권 영역에서 집단적 조치를 위한 만장일치 요구를 완화하여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 등이 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불행히 유럽연합은,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특히 리더쉽이 매우 부족한 시기에 용납할 수 없는 리더쉽의 포기임을 직시해야 한다.

인권 과제

효과적인 국제적 리더쉽을 요구하는 심각한 인권 과제들은 얼마든지 많다. 2005년 9월 전세계 정부들은, 역사적인 선언을 통해, 대규모 잔학행위에 처한 주민들을 위한 보호의 책임의 원칙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다르푸르가 여전히 대량 학살, 강간, 강제 이주의 상징으로 남아 있고, 국제 사회가 실행되지도 않는 유엔 결의의 종이 더미를 만들어 내는 것 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약속은 공염불이 되고 있다. 대량 학살을 막기 위한 군대의 파견에 관한 일반적인 정치적 비겁함이 행동의 부재를 일부 설명해 주지만, 실제로 수단 정부에게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대를 받아 들이라는 압력은 극히 미미하다. 당연히, 수단은 그러한 결단력 없는 태도에 대해 거부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인쇄에 들어간 11월 경 수단 정부는, 부분적으로 중국의 새롭고, 환영할만한 압력에 반응하여, 어느 정도 누그러질 듯한 기미가 있었다. 그러나 살해를 중단시킬 만한, 혹은 수단 정부의 잔혹한 정책에 중지부를 찍을 만큼 충분한 권한과 역량을 가진 군대의 배치를 수단 정부가 허용할 것인지는 현재까지도 전혀 불투명하다.

문제의 일부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그리고 부시 행정부가 뒤늦게 그것을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정당화시키려 한 시도가, 수단과 같은 나라들로 하여금 다르푸르 주민들을 구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에 반대하기 쉽게 하였다는 데 있다. 마찬가지로, 인권 목표의 핵심인 민주주의의 촉진도, 부시 행정부가 이를 군사력에 의한 정권 교체와 동일시함에 따라, 의혹의 눈길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한편, 대량 학살자를 법정에 세우는 일의 중요성은 특히 우간다에서 위기에 처했다. 우간다에서는 살인자들이 살인을 중지하는 댓가로 면책을 받으려 시도하고 있다. 전세계 곳곳에서 테러리즘-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간인을 합법적으로 살해할 수 있다는 위험한 사고-이 용납되고 있다. 이라크는 대규모 유혈 종파분쟁으로 빠져들고 있고, 민간인들이 주된 희생자가 되고 있다. 잔인하고 억압적인 정부들이 북한, 버마,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주민들을 끔찍하게 학대하고 있다. 베트남,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에서 폐쇄적인 독재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퇴보하고 있고, 러시아와 이집트는 비정부기구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페루와 베네수엘라는 비슷한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란과 이디오피아는 반체제인사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5년 5월 안디잔 학살의 독립적인 조사 허용을 거부하면서 또 다시 맹렬하게 반체제인사들을 탄압하고 있다.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허용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나라를 파괴로 몰고 가려는 것 처럼 보인다. 스리랑카에서는 내전이 다시 불붙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의 내전은 악화되고 있으며, 콜롬비아에서는 계속되고, 나이지리아에도 내전이 임박해 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의 전쟁에서 레바논에 무차별공격을 퍼부었고, 한편 헤즈볼라는 아무런 군사적 목표물이 없는 이스라엘 도시들을 공격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범정부 기구 인권이사회는 그의 무기력한 전신인 인권위원회를 능가하는 어떠한 실제적인 개선도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인권이사회는 중요 임무 중 하나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정부들이 변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그 임무는 인권 감시 인력의 배치 또는 공개적 비판까지 이를 수 있는 일련의 단계적 조치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인권이사회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어떤 정부도 비판 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인권이사회를 설립한 고결한 원칙을 조롱하는 것이다. 인권이사회가 이제까지 성취한 것이라고는 유엔 조사자들과의 “상호 대화”와, 이사회가 가장 강력한 도구인 각 정부들에 의한 집단적 비판을 미리 포기하는 “상호 검토(peer review)”이다. 이러한 실패는 유엔이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수호해 나갈 능력이 있는지의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인권을 옹호하는 정부들이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소위 “의지있는 국가의 동맹(coalitions of the willing)”-유엔의 보편적 이상의 반대 명제의 지지자들이 우세를 점하게 될 것이다.

미국 정부: 손상된 신뢰

과거 많은 나라들은 이러한 난제의 해결에 미국이 앞장서기를 기대하곤 했다. 비록 일관성은 없을지 몰라도, 미국은 눈에 띄는, 영향력 있는 인권의 옹호자였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이제 공허하다. 그것은 인권이라는 대의에 있어 커다란 손실이다. 파국으로 치달은 이라크 침공의 결과는 별개로 하더라도, 인권 옹호자로서의 미국의 위신은 스스로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인권침해에 의해 손상되었다. 미국 대사들 중 외국 정부의 가혹한 심문, 재판 없는 구금, 심지어 “실종”에 대해서도, 감히 항의할 수 있는 이는 얼마 되지 않는다. 상대국이 얼마나 쉽게 반격을 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불법 행위를 자신들의 인권유린에 대한 변명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싸구려

변명이지만 효과는 놀랍다. 미국이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국은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될 수는 없다. 미국이 저지르는 인권유린은 이미 미국의 위신을 충분히 손상시켰다.

지난해, 부시 행정부의 (용의자에 대한) 고문 및 학대가 일부 하위 심문담당자의 빗나간 행동이 아니라 상층부의 지시에 의한 정책의 문제라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해졌다. 행정부는 고문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물 속에 빠뜨리는 모의 처형-위터보딩(물고문)이라 불리는 전형적인 고문 기술-을 금지 고문으로 분류하기를 거부했다.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는 대상자가 미국 시민이 아니며 미국 영토 밖에 억류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인권침해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부는 2005년 의회에서 구금자 처우에 관한 법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만큼 다수표를 얻어 채택된 이후에야 이러한 입장을 철회했다. 최악의 순간은 아마도 부시 대통령이 큰 목소리로 고문을 옹호하고, 고문을 “일련의 대안적 [심문] 과정”이라고 미화시킨 2006년 9월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그리고 불법적 고문에 대한 미군 자신들의 저항이 커져가는 가운데, 미국방부는 9월 정보원 심문에 관한 현장 매뉴얼을 채택했다. 이 매뉴얼은 미군이 직접 강제적인 심문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행정부는 여전히 미 중앙정보국 (CIA) 심문담당자들에게 그러한 고문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9월 의회가 채택한 군사 조사위원회법(Military Commissions Act)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의 절대적인 금지를 재확인했지만, 구금자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구금과 처우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부인함으로써 강제력을 훼손시켰다.

행정부가 계속해서 임의의 구금을 테러의 대응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미국 행정부는 무장 분쟁이 끝날 때까지 교전 당사자들이 적의 전투원을 구금할 수 있는 전통적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확대 해석했다. “전세계적 대 테러전”이라는 개념을 휘두르면서, 미 행정부는 세계 어디서든 미국시민이 아닌 이상 누구든 사법적 감시 없이 “적 전투원”으로서 구금할 수 있고, 생명이 끝날 때까지라도 미국이 원하는 한 기소 또는 재판 없이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장했다. 미국 행정부는 구금자가 실제로 무장 분쟁에 관여했는지의 여부를 밝힐 필요성을 거부했다. 이는 적법 절차를 따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전시의 권한에 대한 전통적인 억제수단이다. 한 나라가 그런 특별 권한을 주장할 때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이 위협받게 된다.

실제로, 행정부의 월권은 사람들을 “실종” 시킬 권한을 주장하기까지 이르렀다. 그것은 일체의 고지, 변호사 접견, 적십자의 방문, 바깥 세계와의 접촉이 없이 은밀하게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는 가족과 친구들이 친지의 실종 이유나 생사여부 조차 모르게 한다. 이 혐오스러운 관행은 과거 다른 정부가 그런 일을 행할 때 미국이 광범위하게, 또한 정당하게 비판했던 일이다.

대테러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러한 인권유린은 테러의 위협을 가중시킬 뿐이다. 고문과 임의 구금의 관행은 그 희생자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테러리스트의 모집을 촉진시킨다. 이는 용의자로부터 폭력적으로 얻은 진술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정보를 얻기 위해 경찰들이 지역사회의 협조를 얻는 것을 힘들게 한다. 이는 또한 훌륭한 목적이 비열한 수단을 합리화시키지 못한다는 원칙을 녹슬게 하면서 고결한 도덕적 동기를 무위로 만든다.

이러한 파국적인 과정은 미국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일부를 효과적으로 옹호할 수 없게 만들었다. 미국은 자신이 아직도 국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옹호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고문과 임의 구금으로부터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에 관해서라면, 자신의 위선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인권을 효과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006년 4월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워싱턴 방문은 이러한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 일반적인 관행과는 매우 다르게, 부시 대통령은 “인권”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의미한 것이라고 재빨리 범위를 좁혔다. 그것들 모두가 미국 자신이 존중하는 가치 있는 목표이고 자유이지만, 중국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의 구금과 폭력적인 구금 환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혹자는 인권에 대한 미국의 침묵이, 특정 행정부가 권력의 제재를 경멸한 결과인 만큼,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희망할 수도 있다. 그런 희망의 상당 부분은 새로운 의회가 행정부의 최악의 권력 남용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하게 될 조치들, 그리고 후임 행정부가 그러한 권력 남용을 중단하고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취하게 될 조치들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미 가해진 손상은 더욱 근본적이다.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정부들은 이제 편리하게도 인권의 향상을 “정권 교체” 그리고 이라크 침공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는 수단이 다르푸르에 대한 압력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논리이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일부 미국인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인권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와 역량을 지속시키려면 신보수주의 관점의 군사주의와 민주적 통치의 고결한 요구를 서로 분리해 내야 할 것이다. 인권 옹호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명목상 인권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실체는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미 행정부의 제국주의적인 침공을 정치적 압제과 희생자들을 대변하는 핵심적 의무와 분리하는데에 달려 있을 것이다.

중국

인권에 대한 미국의 위신이 축소된 한편, 중국은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중국의 신흥 경제, 그리고 천연자원의 폭발적 수요는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국제적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지만, 그러한 영향력을 인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극구 피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은, 후진타오의 주석의 말에 의하면, “어떠한 정치적 조건 없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임한다. 실제로 인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관심에서 적대에 이른다.

중국이 국내에서 일상적으로 침해하는, 독립적인 시민사회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권리들을 옹호하기를 꺼리는 것은 위선과 역유입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국이 그러한 걱정을 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 적어도 천안문 민주화 운동의 탄압 이후 중국은 대규모 인종청소 및 반인도주의 범죄는 물론 대량 학살도 자제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다르푸르 주민들이나 버마의 소수 민족 등 그와 같은 심각한 탄압을 받는 사람들을 옹호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행동은 너무 늦고, 너무 부족했다. 인권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외국에 대한 소위 “내정 간섭”을 중국이 이념적으로 불편해 한다는 것으로 일부 설명된다. 다른 일부는 천연자원을 생산하는 나라의 주민들의 생존 보다 자신의 필요가 더 우선한다는 설명이다. 그 두 가지 설명 중 어떤 것이 우위이던 간에, 중국은 자신의 할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못 미치는 역할을 해 왔다.

인권과 무관한 면도 많지만, 특정 문제들에 있어서는 중국이 외국의 내정에 간섭하기를 꺼리는 점이 약간은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9월,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 북한에 석유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듯 했다. 10월, 북한 최초의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때 까지 추가적으로 연료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11 월 중국의 유엔 상임 대표 왕광야는, 비록 불충분하긴 하지만, 수단이 다르푸르에 유엔 평화유지군 배치를 허용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중국은 또한 유엔 평화유지군에 파견하는 군대의 규모를 늘리고 있다.

그러나, 다르푸르에 보호군을 배치하기로 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수단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고 기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중국이 다른 안보리 회원국들과 동조하여 국제적인 “보호의 책임” -대규모 잔학행위의 예방을 목표로 한 정책-을 희생자의 보호를 위해 살인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으로 깎아 내린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나쁜 행동이다. 그러나 중국은 그러한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핵심적인 수단들을 사용하기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막음으로써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켰다.

중국이 수단 석유 수출량의 3분의 2를 구매하고 있고, 수단 석유 산업의 가장 큰 투자자이기 때문에, 수단의 경제가 부흥하고 있으며, 수단 정부는 대담하게 다르푸르에서 학살을 자행할 수 있었고, 전쟁을 위한 무기를(일부는 중국산) 구입할 자금이 넘치게 되었다. 그 수입원을 차단한다면 수단이 다르푸르 학살을 중지하라는 압력을 받아들이고 평화유지군의 배치를 허용할 여지가 더 많아질 것이다. 중국은 현재 북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원유 봉쇄를 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다르푸르에 대해서는 그와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고 알려진 바가 없다. 실제로 중국은 안보리가 4 명의 개인-두 명은 반군 장교, 한명은 잔자위드 민병대 대장, 한명은 전직 군장교-에 대해서만 여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도록 허용했으며, 그 중 주요 정부 관료는 한명도 없었다. 중국이 다르푸르에 흐르는 피를 멈추는 것보다 성장하는 중국 경제에 석유를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면(전체의 4~7% 정도가 수단에서 수입됨), 수단 정부가 협조하도록 공개적 압력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문제는 다르푸르에 그치지 않는다.:

□ 중국은 여전히 짐바브웨의 투자국이자 군수품 공급원이다. 무가베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 세력의 잠재적 지지자로 간주되는 약 70 만명의 도시 빈민들을 강제로 퇴거시켰으며, 그들의 주거지를 불도저로 밀어 버렸다. 반대파 지지자들에게 임의 구금과 고문을

일상적으로 행하며, 국가 경제를 붕괴시켰다. 의료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강제 이주는 특히 수만명의 HIV/AIDS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앙골라에 조건 없이 약 50억 달러를 융좌해 줌으로써, 중국은 앙골라 정부의 국고 횡령을 중단시키고 예산 투명성을 증대시키려 했던 국제통화기금(IMF)의 노력을 사실상 위태롭게 했다. 앙골라 정부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약 40억 달러의 국고를 횡령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앙골라 전체의 복지 예산과 같은 액수이다.

□ 우즈베키스탄 정부군이 2005년 5월 안디잔에서 수백명의 시위대를 학살한 후, 중국은 21발의 예포와 함께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을 맞이했고, 6억 달러 규모의 석유 협정을 발표했다. 2006년 중국은 우즈베키스탄과의 합동 군사 훈련에 참가했으며 2년간의 협력 의정서에 서명했다.

□ 중국은 무자비하며 경제적으로 무능한 김정일 정부가 탈북 난민들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것 보다, 이들 난민이 중국으로 들어 오는 것을 중단시키는 일에 더 관심이 많다. 북한의 끊임없는 압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을 도망쳐 나온 사람들 모두가 경제이민이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유엔 특별 보고관에 협조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이 북한 국경 근처에 있는 난민들에게 접근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압제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에 관련하여 행사한 것과 비견될 만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는 없다. 중국은 일부 난민들이 중국을 거쳐 제 3국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허용하고는 있으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 중국은 버마 군사 정부의 가장 관대한 지지자이며,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는 버마 국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보다는 심수항 접근권과 천연자원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남 아시아 곳곳에서, 중국은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정부들에게 원조를 퍼붓고 있다.

세계의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보다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한 정부가 중국이 처음은 아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오랫동안 그와 동일한 또는 더욱 심한 일을 자행해왔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모든 인민의 기본적 필요를 돌본다는 이념위에 건설되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들의 친구로서의 이미지를 세우려 하고 있다.

중국은 자신들이 직업을 창출하고 빈곤을 감소시켜 준다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외국 원조를 점점 더 늘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행동 중 일부는 그러한 원칙에 위배된다.

중국이 지원하는 억압적 정부들은 주민들을 탄압하고 빈곤하게 하고 있다. 수단의 새로운 석유 부호들은 나일강변에 있는 우아한 식당에서 중국인들과 축배를 들지 모르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가난한 다르푸르 주민들은 그렇지 못하다. 로버트 무가베는 중국 정부 덕분에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지 모르지만, 소위 “하수 정화 작업”에 의해 노숙자가 되어 버린 수십만명의 짐바브웨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버마 군인들은 중국의 도움을 받아 화려한 새 수도를 건설하고, 엄청난 무기고를 확보했지만, 버마 국민들은 비참함과 두려움속에 살고 있다. 중국이 갈망하는 국제적인 존경을 얻으려면, 이러한 정부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독재자들을 지원하고 빈민을 착취하는 정부로 알려지길 원한다고 믿기는 어렵다. 우리는 국제적인 페어 플레이와 협동의 상징-올림픽 게임-을 간절히 원하던 중국 정부가 독재 정부의 희생자들에 대한 국제적 단결을 외면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변화는 중국이 자신의 추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요구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수십년간 중국 정부는 매우 억압적이었고, 그 국제적 역할은 매우 제한적어서, 중국 정부에게 인권에 대한 적대감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중국은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어떤 정부도 중국 정부에 (인권에 대해) 요구할 의지조차 없다면, 중국이 더 나은 행동을 보이기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인권 문제에 직접적으로 부딪힐 때, 중국 정부는 일부 양보를 해왔다. 4월 부시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 정부가 “상호 존중과 평등을 기반으로” “세계 인권의 대의를 옹호할 준비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다르푸르 결의안에 기권함으로써, 중국은 다르푸르에 유엔 평화유지군 배치와 국제형사재판소의 잔학 행위 조사를 허가하는 안보리 결의안 통과를 허용했다. 중국은 또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단 정부에 일부 제한적인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인권을 옹호해 온 정부들은 중국과 무역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 만으로도 바빠서, 중국이 국내외에서 행하는 비인간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거의 내지 않고 있다. 그들이 원칙에 충실했다면, 전세계의 압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비판할 것이다. 중국이 자신의 위법행위 때문에 평판을 잃도록 만들어야만, 더 나은 행동을 하라고 촉구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러시아

러시아 역시 비슷한 궤도를 따랐다. 구 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는 국내적인 혼란이 너무 커서 국제적으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가스 및 석유 보유고의 가치가 치솟고, 푸틴 대통령이 대부분의 다른 국내 권력 기관을 무력화 시켜 권력의 집중을 공고히 하면서, 러시아 정부는 힘을 과시하고 있다. 구 소련 영역에 대한 기득권을 재 언명하기 위해, 푸틴의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카리모프, 벨라루스의 알렉산더 루카셴코, 투르크메니스탄의 사파무라노비치 니야조프 등 독재자들과 친교를 맺고,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의 민주 정부들을 훼손시켰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 안디잔 학살 후 1 주년이 되는 날 하루 전에, 푸틴 대통령은 카리모프 대통령을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함으로써 그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과시했다.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 하원은 우즈베키스탄과의 군사 동맹 조약을 비준했다. 마찬가지로, 충분한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희생자들이 러시아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의 압제를 해소하는데에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러한 국제적 행동은 국내에서의 행동과 일관성이 있다. 그는 체르니아에 군대를 주둔시켜 여전히 고문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다른 어떤 나라의 정보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실종” 시키고 있다. 푸틴은 이러한 폭력 대부분의 배후에 있는 체르니아의 대리인들을 제어할 권력이 있지만, 오히려 그들을 조건없이 지지하고, 그 지도자들을 아낌없이 칭송한다. 러시아 정부는 서로 견제하는 권력 기관들-의회, 주지사들, 전자 언론매체, 기업-을 고분고분한 파트너로 변화시켰다. 얼마 남지 않은 독립적 영역 중 하나인 비정부기구들은 간섭과 폐쇄를 야기하는 새로운 규제에 위협받고 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공격자들이, 체르니아의 잔학 행위를 조사 중이던 안나 폴리코프스카야와 같은 유명 언론인들을 살해하고 있으며, 가해자들 중 누구도 기소된 적이 없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푸틴은 독재자들과의 야합에 아무런 댓가도 치르지 않고 있다. 그의 비행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정부는 거의 없다. 가끔 들리는 불평의 소리는 에너지 거래를 위해 굶신거리느라 거의 들리지도 않는다.

아무런 댓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면, 러시아의 비행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국제적 시민권을 꿈꾼다. 선진 8 개국 그룹(G8)에 가입하는 것은 그래서 러시아에 중요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러시아에게 한 자리를 주는 댓가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6 월 러시아에 이 그룹의 의장 자리를 부여했고, 러시아의 국내외 인권 상황에 대한 어떠한 긍정적인 움직임도 없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G8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게 해주었다.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싶은 러시아의 바람은 (이 보고서가 인쇄에 들어간 시점에 거의 실현된 듯 해 보였다) 러시아가 국제적인 경제 규범에 따라 활동할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 시장을 개방했다고 해서 폐쇄된 독재국가인 러시아를 세계가 용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러시아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아무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러시아의 변화는 불가능하며, 그러한 발언을 할 위치에 있는 정부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개발도상국과 기타 민주국가들

신생, 또는 기존에 있던 몇몇 민주적 개발도상국들이 인권 리더십의 잠재적 원천이 될 수 있다. 이 정부들은 서방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 옹호는 인권이 보편적 가치라는 사실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정부들과 이웃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근접성으로 인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많은 정부들이, 식민주의, 인종주의, 독재이, 극단적인 압제의 시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인권에 대해 특별한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있다. 일부 정부들은 그들의 리더십 잠재력에 걸맞게 행동하기 시작했지만, 현재까지의 그들의 인권에 대한 원칙적인 옹호는 리더십 공백을 채우기엔 너무 산발적이다.

남미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인권 기준의 강화를 지지해왔다. 남미 지역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로마 규정(Rome Statute)을 비준했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했다. 또한 대부분의 정부들이, 국제형사재판소 사법권에서 미국시민을 제외하는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라는, (상당한 규모의 원조를 잃을 수 있다는 위협을 포함하는) 미국의 집중적인 압력에 저항하고 있다. 보다 최근에는 몇몇 나라들, 특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멕시코는 인권이사회의 첫 의장국으로 선택되었으며, 이는 멕시코가 최근 수년간 국제적인 인권 옹호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때문이다. 멕시코 정부는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인권보호를 옹호했고, 유엔 총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을 초안하고, 인권고등판무관실 내에 인권과 테러리즘에

관한 직위를 개설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아르헨티나 역시 유엔 체제 내에서 인권 보호를 지지해 왔으며, 안보리 의석을 이용하여 다르푸르와 버마의 인권 위기 해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에는 중요한 예외들이 있다. 쿠바는 극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는 모든 노력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해 왔다. 콜롬비아 정부는 콜롬비아 주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공격적인 활동을 펼쳤다. 베네주엘라는 주권이 국제적 인권 의무에 우선한다는 주장을 앞장서서 옹호해 왔다.

아프리카의 긍정적인 변화에는 라이베리아 대통령 엘렌 존슨 서리프가 전직 대통령 찰스 테일러를 전쟁 범죄 및 반인도주의 범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고, 나이지리아 대통령 올루세진 오바산조가 결국 그 요구를 따른 것, 그리고 세네갈 대통령 압둘라예 와데가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의 요구에 뒤늦게 동의하여 전직 차드 대통령 히세네 하브레를 조직적 고문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 포함된다. 비록 수단 정부의 방해로 유엔의 도움을 받지 못해 7,000 명의 보호군으로는 임무를 수행하기가 불충분하지만, 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약속을 근거로 만들어진 기관인 아프리카 연합 역시 다르푸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6 월에는 아프리카 신경계 파트너십 상호 검토 메카니즘(African Peer Review Mechanism of the New Economic Partnership)은 르완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의 몇몇 측면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보고서를 완성했다. 이 보고서는 아프리카의 인권 상황에 대해 아프리카인이 쓰는 정기적인 보고서의 시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나의 인권 상황 또한 검토 대상이 되었다.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 인권 노력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지자로 떠올랐다. 다만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대한 압제를 막는 것보다 정권 붕괴를 막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듯 보인다. 그런 가운데도 중요한 긍정적 변화는 서울이 11 월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들의 인권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일반이 아닌 예외이다. 인권이사회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지역적 충성심으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인권을 옹호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몇몇 정부들-가나, 말리, 세네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와 인도네시아 까지-이 알제리와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의 입장에 따르게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민주국가이자 잠재적 리더인 인도는 여전히 국제적인 인권 옹호에 대한 냉전 시대적 반감에 빠져 있다. 인도는 버마의 극악한 인권 상황을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인도는 11월 중국과의 정상회담 기간동안, 티베트인들에게 송환으로 인한 고통을 공개적으로 항의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은, 인도가 타지역 국가들이 남아시아에 관여하는 일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했다는 것이며, नेपाल 사태가 재앙이 되지 않도록 막아준 성공적인 유엔 인권 감시단의 배치를 지지했다는 것이다.

남아프리카는, 인종차별정책(apartheid)에 대항하는 강력한 (국제적) 대중 운동의 수혜자였다는 것을 잊은 듯이 보이며, 오직 조용한 외교만이 로버트 무가베가 짐바브웨 국민들에게 가한 인권유린을 해결하는데 적합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무가베 자신은 인종차별정책의 강력한 반대자였지만, 남아프리카 대통령 테보 음베키는 자신의 예전 정치적 동맹자에 대한 존중을 그들이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던 인권 원칙에 대한 존중보다 앞세우고 있는 듯 보인다.

결과적으로, 신생 민주국가들이 인권 보호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야 하지만, 아직은 리더십 공백을 채울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미국이 전반적으로 인권 옹호의 자격을 상실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그러한 노력을 훼손시키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자기 몫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난국을 해결하고 리더십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다. 유럽연합은 중요한 민주주의 국가 집단이며, 인권과 법치주의의 약속 위에 건설되었다. 그러나 슬픈 진실은 유럽연합이 지도적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이 인권 문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때, 이는 한 국가의 수장이나 외교부에 의한 강력한 공개적 선언이 아니라 브뤼셀 관료에 의해, 혹은 유럽연합 의장 명의의 보도자료 형식을 취한 적이 너무도 많았다. 그러한 성명이 단호한 행동 또는 인권 보호의 압력으로 이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 부분적으로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또 부분적으로는 정치적 의지의 부족 때문에, 인권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대이하의 직무수행은 리더십의 공백으로 이어졌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유럽연합의 역할은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미국은 이사회 선거에 나서지도 않았는데, 이는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에 근거한 결정으로 보인다. 새로운

이사회가 그를 탄생시킨 이상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은 유럽연합과 가까운 파트너들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등의 국가에 달려 있다.

인권이사회는 강제적 기준으로서의 인권 원칙에 대한 전통적 지지자들과 반대자들로 양분되어 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몇몇 민주국가들이 부동표를 갖고 있다. 부동표를 대표하는 국가들과 함께 일하도록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협력함으로써, 유럽 정부들은 다르푸르의 반인도주의적 범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살인적 면책, 스리랑카의 내전 재발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 다수를 끌어 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슬픈 현실은 핵방꾼들-이사회를 약화시키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정부들-이 유럽과 다른 동맹국들을 포위하고 있다는사실이다. 당황한 상태에서, 인권 옹호국들은 패배주의에 빠져 유약한 변명을 늘어 놓았다.

유럽연합과 기타 인권을 옹호하는 정부들은 이사회에 인권유린 정부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전망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부동표를 대표하는 국가들이 핵방꾼들이 이끄는 지역주의가 아니라 자국의 인권 원칙을 따르도록 설득하는데 필요한 접촉과 로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유럽연합 및 기타 국가들은 핵방꾼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 다르푸르 또는 스리랑카의 악화되는 상황에 대한 특별 회기를 열도록 요구하지도 않았다. 많은 지지자들이 핵방꾼들이 입에 달고 있는 “협조는 하되, 비판은 안된다” 는 말을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이는 심각한 폭력에 대한 비판이 그러한 폭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정부의 협조를 얻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척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사회는 매우 부정적인 첫인상을 남겼다.

의사 결정

유럽연합의 무능함은 부분적으로는 어려운 의사 결정 과정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 25 개 국가(이 보고서가 인쇄될 때는 27 개가 될 예정)의 만장일치를 이뤄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많은 지연이 생기고 그 입장 또한 최소공통분모의 경향을 띠게 된다. 유럽연합의 효과적인 입지를 방해하는 것은, 예를 들어 사이프러스는 터키에 대해, 독일은 러시아에 대해, 프랑스는 튀니지에 대해서 그렇듯이, 편협한 자국이익에 매몰된 한 나라로 충분하다.

예를 들어, 독일의 새로운 동방정책은 중앙 아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강력한 인권 입장을 약화시키고 있다. 2006년 11월, 독일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제재 해제를 위해 설정된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미있는 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안디잔 학살 이후 우즈베키스탄에 가해진 최소한의 제재 조차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유럽연합의 요구에 따라 학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허용하기는 커녕, 우즈베키스탄은 안디잔에 대한 “대화”와 “전문가 세미나”만을 허용했다. 한편, 감히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한 탄압이 가해졌고, 2006년 한 해에만 십수명의 인권 운동가들이 정치적으로 조작된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수감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엄청난 가스 보유고를 갖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독일군에게 유용한 공군기지를 갖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지지 입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독일은, 제재안이 채택된 그 순간부터 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고도, 그러한 제재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우즈베키스탄 고위 관료들에 대한 유럽연합의 여행 금지 제재가 발표되자마자, 독일은 여행 금지 리스트 일순위인 안디잔 학살의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인 전직 내무부 장관 조키르 알마토브에게 신병치료를 위한 독일 입국을 허용했다. 희생자의 유족들 중 몇 명이 개인적 위험을 무릎쓰고 그를 고소하려 했을 때, 독일 연방 검찰은 그를 체포하기를 거부했고, 범죄 사실에 대한 조사 조차 하지 않았다. 우즈베키스탄이 한 어떤 행동도 독일의 항복적인 자세를 정당화시키지 못한다. 독일은 상당히 많은 회원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을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듯 하다.

독일은 카자흐스탄이 2009년 유럽 안보 및 협동 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의장직을 맡으려 했을 때, 카자흐스탄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브의 야심을 이미 오랫동안 지연된 구체적인 개혁을 착수할 기회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조건없는 지지를 보냈으로써 카자흐스탄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지를 약화시키는데 앞장섰다.

네팔에서도 마찬가지로, 2005년 2월 왕정 쿠데타 이후, 북유럽 정부들은 쿠데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군사 정부가 유럽연합의 원조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를 원했다. 덴마크가 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 반면,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정부들은 유럽연합의 합의를 약화시켰다. 영국 역시 네팔과의 역사적인 관계를 이유로 들며, 독자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타협적인 정책을 추구했다. 결국 유럽연합은 쿠데타의 즉각적인 여파 속에서 약한 입장을

채택했고 이로 인해 네팔의 시민사회는 국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깊이 실망했다.

유럽연합이 최소공통분모적인 입장에 편향되어 있는 것은 효율보다 단결을 선호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공동의 입장을 성취하는 것이 유럽 국가들의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함께 행동함으로써, 유럽연합 정부들은 개별적으로 행동할 때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보복을 당할 위험도 더 적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장 주저하는 회원국의 의지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보다 빠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공동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보다는 다수결을 허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조치에 대한 각국의 거부권과 주권 국가로서의 특권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유럽연합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여전히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세계의 억압받는 주민들 편에서 보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 또한 값비싼 댓가가 따른다.

만장일치의 조건 안에서라 할지라도, 개선은 가능하다. 그 한 예로 인권이사회에서 유럽연합은 터무니 없을 정도로 사소한 수준까지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전략을 승인하고, 유럽연합 대표부가 그것을 지혜롭게 추진하도록 신뢰하기 보다는, 제안된 모든 결의안에 대해 단어 하나 하나 까지 승인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미시적 관리는 유럽연합이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 또는 다수 동맹을 결성하기 위한 속도 있는 외교적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인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유럽연합은 공동의 입장을 목표가 아닌 시작점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핵심 인권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의 공동 입장 이하로 행동하는 정부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부도 공동 입장 이상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인가? (그런 행동에 대한) 공식적인 금지는 존재하지 않으며, 또 경우에 따라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는데, 국제형사재판소 조약, 대인지뢰 금지 조약, 강제 실종과 관련한 조약 등이 그 예이다. 덴마크는 다르푸르와 관련하여 이러한 접근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럽연합 국가들은 유럽연합 전체의 분명한 공동 입장이 없다는 이유로 자국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것이 이를테면 세금 또는 무역 문제와 같은 것이라면 모르나, 인권에 대한 국가적 조치, 혹은 여러

국가들의 집단적 조치를, 최소 합의를 넘는다는 이유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행위이며 또한 집단을 효율보다 우선시하는 일이다. 결국 유럽연합은, 그 이상(ideal)과 고결한 맹세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개별적인 인권의 옹호보다 약하고 일률적인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결론 지은 것으로 보인다.

만장일치의 규칙에서 반가운 예외 하나는, 25 개국 전체의 동의를 얻으려는 시도가 실패한 후 2006 년 11 월, 14 개의 유럽연합 회원국이 유엔 총회에서 우즈베키스탄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결정한 일이다. 그와 같은 시도가 더 많이 필요하다.

우리의 목표는 25 개의 서로 다른 외교 정책이 있는 유럽연합 이전 시대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다. 숫자는 힘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유럽국가들의 상대적 부재는 그러한 혼란의 땀가를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 많은 정부들이, 단체적 접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향력이나 상승효과 없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와의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카불의 유럽연합 사절단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은 그것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아프가니스탄 경찰 개혁과 이탈리아의 아프가니스탄 사법 개혁은 서로 협력 없이 진행되었다. (후자는 2006 년에 종료) 지방 재건을 맡은 정부들은 개발 작업을 통합하지 않는다. 유럽연합의 나토 군사 작전 참가국들은 자체적인 제한을 부과했으며, 그것은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방해했다. 독일군은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반군들과 직접 교전하지 않으며, 영국군은 마약 운반자들이 설사 반군을 지원한다 해도 그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네덜란드군은 구금 자체를 꺼려 한다. 여전히 소수에 의한 강력한 조치가 다수에 의한 유약한 조치 혹은 행동의 결여보다 나을 때가 있다.

공동 입장이 달성된 때조차도, 거의 전적으로 의장국을 통해서 발언하고 활동하는 유럽연합의 방식은 그 영향력을 약화시킬 때가 많다. 인권이사회에서, 의장국을 통해서 발언하며, 개별 회원국의 공동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허락하지 않는 유럽연합의 전통은 반복의 가치를 학습해온 핵방꾼 국가들이 토론을 장악하도록 만들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구축하는데 있어, 유럽연합의 6 개월 단위 의장직 순환보다 더 비효율적인 방식은 상상하기 어렵다. 인권이사회에 결정적인 초기 6 개월간 핀란드가 의장직을 맡았을 때와 같이, 의장국이 자신의 책임이 리더로서가 아니라

만장일치를 끌어 내는 것으로 보고, 의장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자체를 매우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경우, 보다 유능한 정부들이 의장직을 맡지만, 그들도 6 개월이라는 단축된 기간안에 협의사항을 끌어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차기 의장국,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의장직 트로이카의 한 부분을 유지하는 전통이 자승자박적인 약조건을 어느 정도 중화시키지만, 결코 충분하지는 않다. 리더십 순환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평등을 확인해 주지만, 각 정부에게 장기적인 책임을 맡지 않게 하는 것-따라서 전문성과 장기적 전략의 개발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것-은 기능 장애를 보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란과와 핵문제 협상과 같은 일부 경우에, 영국, 프랑스, 독일 3 대 강대국을 유럽연합 대표로 지명함으로써 이러한 기능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중요한 인권 문제에 관련해서는 비슷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다양한 회원국 구성이 절차적 문제라기 보다는 자선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25 개 회원국들은 세계의 다른 지역들과 다양한 경험과 관계를 축적해 왔으며, 이는 “가장 최근의 트로이카”의 순환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문성의 트로이카”, “효과성의 트로이카”를 통해 활용될 수 있다. 6 개월 마다 새로운 3 개 정부를 대표로 내 보내는 것 보다, 똑같은 3 개의 정부가 해마다 같은 문제 지역을 방문하고, 연속적인 관심과 임무를 완성하려는 결단력을 보인다면 유럽연합의 영향력은 크게 강화될 것이다.

유럽연합의 인권에 대한 효율성은 또한 투명성의 결여에 의해 방해 받는다. 인권의 촉진은 때로 다른 정부의 이해관계와 부딪칠 것이다. 비공개로 인권 전략을 개발하고 추구하는 것은 유럽연합이 어떻게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는지 일반이 알기 어렵게 만든다. 너무나 많은 핵심적 결정들이 각국의 수도가 아닌 브뤼셀에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결정 중 유럽연합 의회에서 토론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정부들은 당황스런 공개적 감시를 피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결과는 유럽연합의 약한 인권 약속과 내세울 것 없는 성과에서 감지된다.

이러한 절차적 실패가 인권에 대한 유럽연합의 리더십 실패를 전부 설명해 줄 수는 없다. 문제의 대부분은 정치적 의지의 결여로 인한 것이다. 인권을 촉진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댓가를 요구하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고, 많은 정부들이 구태여 나서고 싶어하지 않고,

적어도 입에 발린 말 이상은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절차가 문제이건, 약속이 문제이건, 인권의 원칙적 옹호자로서의 유럽연합의 신뢰성은 위기에 처해 있다.

인권에 대한 유럽연합의 리더십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주요 강국인 러시아, 미국, 중국, 다르푸르 등의 위기, 기타 인권 문제, 유럽연합 자체 내의 인권 문제 등, 몇 가지 과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중국에 대해

중국에 대해서, 유럽연합은 대부분의 공식 비평을 무시하기 쉬운 애매모호한 성명으로 발표하면서, 인권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낮추어 왔다. 유럽연합은 중국과 정기적인 인권 “대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주체는 중간 관료들이며, 매번 새 의장국의 대리인이 주최하며, 회의를 거듭함에 따라 진전을 측정할 만한 명확한 비교기준이 없고, 가시적인 결과도 없다. 대조적으로, 중국은 비판의 화살을 피하고 개혁의 요구를 막기 위한 대화 전문 팀을 구축했다. 결과적으로, 대화는 외부 공개를 통해 중국의 명성을 위태롭게 하고 변화에 박차를 가할 위험없이, 외교부 내에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다.

이러한 대화가 무의미한 것은 2006년 9월, 원자바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헬싱키에서 열린 가장 최근 중국-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드러났다. 유럽연합 의장국을 대변하여, 북경 주재 핀란드 대사 안티 쿠오스마넨은 인권이 정상회담의 “지배적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인권이 “가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민감하고 섬세한 문제”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보편적인 인권 기준을 일격에 주관성의 영역으로 격하시켰다. 예견된 대로, 기업 및 안보 문제가 어젠다를 압도해 버렸고, 이는 이후 원자바오 총리가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방문했을 때나, 자크 시락 프랑스 대통령이 북경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마찬가지로, 10월 유럽연합의 대외관계 집행위원(External Relations Commissioner) 베니타 페레로 왈드너와 무역 집행위원(Trade Commissioner) 피터 만델슨은 대중국 관계의 “포괄적 재구성”을 촉구했지만, 인권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의 제안은 원칙보다 이익을 앞세우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처럼 인권에 대한 압력의 부재를 느낄 수 있는 한 영역이 인터넷에서의 자유이다. 중국 정부의 압력에 저항하기 위한 유럽연합(혹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회사들은 중국 정부를 대신해 (사용자들에 대한) 인터넷 검열을 하는 등 최악을 향한 경쟁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중국 관계에서 인권에 대한 몇 가지 긍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독일 총리 메르켈은, 중국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북경에 갔을 때, 농촌 지역의 문제와 불안 문제를 다루는 중국 운동가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1989년 천안문 유혈 사태 이후 시작된 대중국 무기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는 만장일치의 원칙이 강력한 인권 주장을 가능하게 한 드문 경우로, 원래 만료 기한이 없는 제재는 그것을 해제하기 위해 공동 입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2008년 올림픽 이전에 제재 조치가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아직도 해제를 위한 요구 조건들-천안문 사태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 등-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잠재적인 영향력의 원천을 낭비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해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정책은 독일이 장악하고 있으며, 독일은 2007년 전반기 유럽연합 의장직을 맡을 예정이다. 독일의 새로운 동방정책은 부대 조건 없이,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포용하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반영한다. 러시아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존경받는 대화 상대자로서, 독일 정부는 많은 유럽 국가들의 우선 순위인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는 것이 러시아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독일이 러시아 정부에 대한 비판을 꺼리는 것은 2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공격으로 죽은 수백만명의 러시아인들에 대한 죄책감에 영향을 받아서 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조상들이 겪은 고난 때문에 왜 현재의 압제의 희생자들이 고통받아야 하는지는 설명 되지 않는다. 유럽연합은 6개월에 한번씩 러시아와 인권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이 역시 주체는 하급 외교관들이다. 인권은 광범위한 유럽연합-러시아 어젠다에서 중요하게 취급 받지 못한다. 중국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은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러시아의 새로운 법률과 같은 개별적인 사건 또는 경우들에 간헐적으로 대응하긴 하지만, 인권이 고위 관료들의 공적인 담론에 포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체르니아에서의 잔학행위는, 어떠한 법적 책임의 공개적

요구도 없이, 심지어 “실종” 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언급도 없는 가운데, 거의 잊혀지고 있다.

중국을 방문했을 때 처럼,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러시아 방문시 러시아의 인권 운동가들을 만났다. 또한 그녀는 러시아에서의 인권과 법치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그러나 다른 유럽 지도자들중 누구도 그녀에게 필적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이 없었고, 유럽연합의 공동 입장에 반영되지도 않았다. 프랑스 대통령 시락은 심지어 푸틴에게 레종도뇌르 대십자 훈장(Grand Cross of the Legion of Honor)을 수여했다. 대조적으로, 2006년 네 번의 사건에서, 유럽 인권법정은 체르니아인들의 강제 실종에서 러시아 군대와 그 대리인들이 한 역할로 인해 러시아 정부가 생명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에 대해

미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의 행동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한다. 미국의 유럽 내 구금자 관리의 유럽 정부를 고문, 임의 체포, 강제 실종의 공범으로 만들고 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자국 영토 내에 “실종된” 용의자의 비밀 감금을 허용했다는 증거가 있다. 미국 의회가 이 일을 조사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반면, 유럽 의회는 조사를 시작했다. 의회의 임시 위원회(temporary parliamentary committee, TDIP)는 이러한 활동들이 유럽 정보기관이나 보안 기관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전적으로 믿기 어려운 일” 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유럽 영토에서 용의자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고문이 자행되는 나라로 이송하여 심문(rendition) 하는 일에서도 유사한 공식적 공모를 발견했고, 한편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에게 “분명한 책임” 이 있음도 밝혀 냈다. 그러나 폴란드는 비밀 감금소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에 협조하기를 거부하면서, 연루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거부했다.

반면 이탈리아의 법정은 보다 강하게 대응하여, 2003년 “아부 오마르” 로 알려진 오사마 무스타파 하산 나스르를 납치하고 이집트로 이송해 고문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 중앙정보국 요원들과 그들의 이탈리아인 공범들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11월에 로마노 프로디 수상의 새로운 정부는 납치 가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군사정보국(SISMI)의 수장을 “자연스런 배치 순환” 이라며 교체 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게 진짜 시험은 정부가

법원의 범죄인 송환요청을 미국 정부에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납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이다.

유럽 밖에서의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은 고문 및 기타 폭력적 심문에 대한 미국의 공모 혐의에 대한 유엔 고문위원회(UN Committee against Torture)의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고위급 논평도 공개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또한 유럽연합이 관타나모 베이의 미국 구금시설 폐쇄를 집단적으로 요구하기까지 수년이 걸렸으며, 이는 2006년 6월 유럽연합-미국 정상회담 이후야 이루어졌다. 유럽연합의 요구 이전에 영국, 독일, 스페인의 비슷한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미국이 석방한다 해도 고문을 받을 위험 때문에 모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구금자들을 받아들이는 인도주의적 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했다. 결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알바니아 한 나라 만이 관타나모에서 석방되었지만 중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없는 5명의 위구르인들과, 이집트, 알제리,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구금자들을 재정착시키는데 합의 했다.

다르푸르에 대해

다르푸르의 엄청난 위기를 해결하는데 있어, 유럽연합은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아프리카 연합군(AMIS)를 지원하기 위해 보낸 자금을 광고하곤 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유엔 안보리가 8월달에 승인한, 장비와 인력이 더 우수한 유엔 보호군을 받아들이라고 수단을 설득하는 데는 거의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수단의 남북간 내전 당시 무기 제재 조치를 가했지만, 다르푸르 분쟁이 시작된 이후 제재를 실행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대화를 선호하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다르푸르 학살에 책임이 있는 수단 고위 관료들에 대한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을 거부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무역제재에 부응하기는 커녕, 유럽연합과 수단, 특히 프랑스와 수단 간의 무역은 크게 증가했다.

문제의 일부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유럽연합의 다르푸르 정책을 브뤼셀이 아닌 뉴욕에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기여를 인정 하자면,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안보리 내에서 다르푸르의 잔학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후 다르푸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세우는 중요한 임무도 현재진행중인 살인, 강간, 강제 이주를 중단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 수단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협력을 구하는데 있어, 유럽연합은 2006년 11월 중국-아프리카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에게 다르푸르 문제를 제기했고, 독일 총리 메르켈은 중국 및 러시아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다르푸르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수단이 유엔 보호군을 받아들이고 잔혹한 다르푸르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려는 노력은, 수단 정부와 그들의 하수인들이 계속해서 면책권을 갖고 민간인들을 공격하는 현실을 변화시킬 만큼 강하지도 지속적이지도 않았다.

기타 인권 문제들에 대하여

유럽연합은 많은 나라들의 인권 문제에 적절히 대응 하는데 실패해 왔다. 때로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 버마에서, 유럽연합은 망명 민주화 운동을 지원한다. 또한 버마 정부를 비판하고 한정된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몇몇 유럽연합 국가들은, 버마 군대가 경제의 많은 영역에서 강제 노동을 사용하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버마에 상당한 무역 및 투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버마의 이웃 나라들이 드러내놓고 비판을 할 때, 유럽연합의 많은 강대국들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심지어 9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 버마의 외교부 장관을 초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태국에서, 유럽연합은 탁신 시나왓 수상을 실각시킨 2006년 9월의 군사 쿠데타에 강력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탁신의 5년 임기동안 탁신이 벌인 마약과의 전쟁에서 2,500명을 법외 처형 하고,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남부지방의 반군을 잔인하게 진압하고, 난민 보호를 약화시키는 등, 악화되는 인권 상황에 그저 조용하게 우려를 표했을 뿐이었다. 한편, 유럽연합은 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 중동에서, 대부분 나라와의 무역 및 협력 협정에 인권 조항들을 두고 있는 유럽연합은 인권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2005년 전 레바논 수상 라피크 하리리의 자동차 폭발 살해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지지한 것이 주된 예외이다.

□ 이디오피아에서, 유럽연합은 논란이 많았던 2005년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정부의 폭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유럽연합은 그러한 비판을 일부 행동으로 뒷받침했으며, 이디오피아 정부에 대한 다국적 예산 지원 중 3억 7천 5백만 달러 이상을 철회하거나 경로를 조정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정치적 반대 인사들에 대한 탄압, 감벨라 지역

아누악 소수민족에 대한 구타, 강간, 범외 처형 등, 이디오피아의 계속되는 주요 인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 후속행동을 하지 않았다.

□ 유럽연합은,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 찰스 테일러를 시에라 리온 특별 법정에 내주도록 나이지리아를 압박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찰스 테일러는 시에라 리온의 잔혹한 혁명연합전선(Revolutionary United Front)을 지지함으로써 반인도주의 범죄 및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에라 리온 특별 법정이 테일러가 프리타운에 구금된 것과 관련된 보안 문제로 재판 장소를 헤이그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라이베리아도 지지한 사안이었으나, 유럽연합은 머뭇거리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즉각 장소를 제공했으며, 네덜란드는 유죄 판결이 날 경우 다른 나라가 테일러의 구금을 맡는다는 조건 아래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서아프리카가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테일러의 이송은 유럽연합이 테일러의 구금을 맡을 정부를 찾는 몇주 동안 지연되었다. 결국은 영국이 앞으로 나섰다.

□ 자국의 상황을 비판하는 어떠한 단체도 용납하지 않는 튀니지 정부는, 유럽연합이 독립적인 튀니지 인권연맹(Tunisian Human Rights League)에 승인한 일련의 지원금과 다른 독립적 단체들에게 교부하기를 희망하는 지원금을 수년째 막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이러한 현재 상황을 매우 부드러운 표현으로 외엔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보면, 특히 군사 작전과 관련된 임무에 관해서는 유럽연합이 때때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 유럽연합은 전쟁시 잔학 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법정에 세울 여지를 남겨 놓도록 인도네시아 정부를 압박하지는 않았지만, 아체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감시팀을 가동시키는데에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 2006년 10월 콩고 선거에 앞서 파견된 유럽연합군은 안전을 유지하려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노력에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위해 병사들을 귀국시키겠다는 독일의 주장은, 논란이 되는 선거 결과를 두고 정치적 긴장이 여전히 높은 때에 병력을 줄이는 위험을 유발했다. 그 위험성은 2006년 11월 말 콩고 동부의 새로운 반란에 의해 분명히 드러났다.

□ 2006년 10월 유럽 의회는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임시 무역 협정을 위해 유럽위원회(Europe Commission)가 내놓은 제안을 거부했다. 의회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인권 상황의 명확하고, 가시적이며, 지속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때만” 협정을 승인할 것임을 강조했다.

□ 6,000명의 유럽연합 군이 보스니아에서 평화를 지키고 있는 한편, 2007년 중반 경 규모가 축소된 국제적인 민간인 대표단의 상황을 독자적으로 책임질 예정이다.

□ 코소보에서 유럽연합은, 코소보 영토의 지위가 결정되는 2007년에 배치될 국제적인 민간인 사절단을 책임질 계획이다. 그 주요 임무에는 사법 및 경찰 활동이 포함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가입 과정을 통해 인권에 대한 강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을 위한 만장일치의 조건은 유럽연합의 영향력을 낮추기 보다는 후보 국가들에 대한 기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 온다.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후보 국가가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유럽연합이 발칸 반도 지역의 전쟁 범죄에 대한 각 국가의 책임에 충분히 초점을 맞추지는 못했지만, 인권을 유럽연합 가입의 판별 조건으로 삼는 사실의 영향력은 지난해 발칸 반도에서 가장 강력하게 감지되었다. 어떤 조건으로도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몇몇 국가들의 반대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서 가입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발표된 인권의 기준이 무색해 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영향력이 최근 터키에서도 감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예외들이, 현재 가장 중요한 몇몇 인권 과제들에 대한 유럽연합의 효과적 대응을 방해하는 정책상의 연속성 부재를 상쇄하지는 못한다. 유럽연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제적 리더십 역할을 맡고자 한다면, 보다 단호하고 일관성 있는 인권의 목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연합 내의 인권

유럽연합 내부에서 인권 문제에 관한 정책들은 이주자 및 망명 희망자들에 관한 한 특히 실망스럽다.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이주자들이 물리는 것을 막겠다는 유럽연합의 결정은 이주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고국에서 박해를 피해 유럽에 온 망명 희망자들의 권리를

제한했다. 2006년 1월, 모든 회원국들이 유럽연합의 “안전한 국가” 목록에 속한 나라에서 온 망명 희망자들을 되돌려보내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망명 절차 명령(Asylum Procedure Directive)이 발효되었다. 어느 국가들이 목록에 올라야 하느냐가 합의되지 않아서 아직 실행은 안되고 있지만 (제안된 많은 나라들이 현실적 안전 여부가 모호하다), 몇몇 회원국들은 이미 자체적인 안전 국가 목록을 따르고 있다.

이주자 관리를 “국제화” 하려는 이러한 노력속에서, 유럽연합은 리비아와 같은 인권유린 국가들과 협력을 맺고 있다. 리비아는 유럽에서 보호와 일자리를 구하려는 수천명의 이주자들이 거쳐 가는 곳이다. 리비아-유럽연합의 이주자 협정은 일차원적이며, 유럽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주자들의 권리 또는 난민 주장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동쪽 끝에서,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의 폭력적인 구금 관행과 거의 기능을 하지 않는 망명 제도에 대한 계속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에 보호를 요청하는 제 3 국인을 재입국시키도록 하는 재입국 협약(readmission agreement)을 맺었다. 그러한 송환이 시작되기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은 문제투성이인 우크라이나의 체제를 바로 잡기에 결코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2006년 해상으로 도착한 이주자의 대부분을 받은 스페인은 세네갈, 모리타니아 등의 나라와 재입국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은 일반적인 형법을 통해 테러 범죄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만,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은 법치 체계 전체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 영국은 14일에서 28일로 기소전 구금을 늘리는 법을 통과 시켰으며, 다시 90일로 늘릴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대테러 법률을 심사중인 네덜란드는 기소전 구금을 3일에서 14일로 늘릴 자세이다. 2006년 1월 시점에서, 프랑스의 테러 용의자들은 변호인 접근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6일까지 구금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경찰 심문자들은 구금자들을 원하는 만큼 심문할 수 있다.

일부 유럽연합 국가들은 테러 용의자들을 송환 또는 추방함으로써 자국 내에서 형사 기소를 피하려고 하며, 고문 위험이 있는 곳으로 돌려 보내려 하는 경우도 많다. 영국은 기소 없이 용의자들을 구금하고, 해당 정부들의 알박한 인도주의적 처우 약속을 근거로 리비아나 요르단 같은 나라로 용의자들을 돌려보내려고 시도해 왔다. 영국은 이러한 국제법 위반을 테러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정당화시키나, 자국 검사들이 법정이 허가한 도청자료를

재판에 증거로 제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서구의 민주국가들 중 단 두나라, 영국과 아일랜드 만이 이러한 극단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이러한 법 실행 수단들을 시도해 보기도 전에 왜 기본권 희생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네덜란드는, 역시 학대를 하지 않겠다는 신뢰할 수 없는 약속을 근거로, 계속 일부 테러 용의자들을 터키로 추방하려 하고 있다. 스위스를 포함한 다른 정부들은 현재 이러한 미심쩍은 정책을 도입할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역설적인 것은 유럽 의회가 고문 위협이 있는 나라로 테러 용의자들을 보낸 미 중앙정보국의 행위에 있어서 유럽의 책임을 조사하는 와중에, 몇몇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자국의 대테러 조치라면서 그와 유사한 나라들로 테러 용의자들을 이송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결론

전세계의 정부들은, 자국민의 처우이건 다른 정부와의 관계에서건, 언제나 인권 문제를 회피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스스로의 가치와 제도가 그들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외부의 압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유혹에 빠지는 정부들은 인권이 자국에서 존중받고 외교 정책에서 합당한 자리를 얻을 때까지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신뢰성이 손상된 이 시대에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지 않는한, 세계의 독재자들은 무제한의 자유를 누릴 것이다. 유럽연합의 회원국들과 민주적 개발도상국가들은 상황이 어려울 때 무리 속에 숨는 방식으로 다수의 편안함을 추구했다. 유럽연합 정부들은 만장일치의 원칙 뒤에 숨고, 다른 민주 국가들은 지역적 연고 뒤에 숨는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 하는 이 때에, 리더십의 부담을 회피하는 이런 방식들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이런 변명에서 벗어날 때다. 새로운 인권 리더십은 개발도상국들 중 비전을 가진 정부들로부터 올 수 있고, 보다 유능한 유럽연합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미국의 새로운 의회가 자기 목소리를 찾는다면, 이상을 회복한 미국 정부에게서 올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이건, 전세계 주민들은 실질적인 인권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20 세기의 위대한 국제 인권 조약들이 21 세기의 위선과 공허한 약속에 길을 내주지 않으려면 이러한 요구의 긴급성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

이 보고서는...

이 보고서는 전세계 인권 상황에 대한 휴먼라이츠워치의 17 번째 연간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전세계 70 여개국의 주요 인권 문제들을 요약하고 있으며, 2006 년 11 월 중반까지의 사건들을 토대로 하였다.

각 나라별로 기록된 내용은 중요한 인권 문제들을 밝히고, 현지 인권 운동가들의 활동할 자유를 조사하고, 미국, 유럽연합, 일본 및 다양한 지역적, 국제적 조직 및 기관 등, 핵심적인 국제적 관련자들의 대응을 조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2006 년 휴먼라이츠워치 연구원들이,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 국가의 인권 운동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가운데 수행한 광범위한 조사 작업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정부들과 국제적인 기관들로 하여금 인권침해를 억제하고 인권상황을 개선시키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휴먼라이츠워치의 인권옹호팀(advocacy team)의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 일년 내내 발간되는 휴먼라이츠워치 출판물들은 이 보고서에 모아진 간략한 개요들에서 언급된 많은 문제들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 출판물들은 휴먼라이츠워치 인터넷 주소 www.hrw.org 에서 볼 수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는 휴먼라이츠워치가 일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별도의 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다 논의하고 있지도 않다. 특정 국가나 문제들을 포함하지 못한 것은 많은 경우 인력의 한계 그 이상을 의미하지 않으며, 문제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단지 휴먼라이츠워치가 다룰 역량이 없을 뿐인, 많은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

2006 년 우리 활동의 초점을 결정할 때 고려 대상이 된,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을 결정하게 한 요소들에는 특정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의 수와 그러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문제 국가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그 나라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확보의 가능성,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세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 중요한 특정 주제를 다루는 것과 지역 인권 기관들의 활동을 강화하는 일의 중요성 등이 포함된다.

세계 보고서(World Report)는 우리의 주제별 인권을 다루는 별도의 장은 없지만 대신 그러한 자료들을 각 국가별 장에 직접 포함시켰다. 휴먼라이츠워치 홈페이지 (www.hrw.org)를 통해 아동 인권, 여성 인권, 무기 및 군사 문제, 기업과 인권, 에이즈와 인권, 국제 사법, 테러와 대테러, 난민과 유민,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인권 등 주제별 인권 상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그리고 휴먼라이츠워치의 인권국제영화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